

대외관계업무처리에관한지침중 개정지침

대외관계업무처리에관한지침중 외국인사의 초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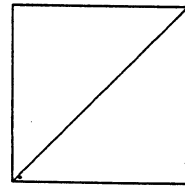
3. 외국인사의 초청에 관한 사항

가.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업체(이하 "정부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의 고위인사를 국내에 초청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외무부 등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칠 것.

- 1) 외국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단, 국가원수, 국무총리, 외무부장관은 제외
- 2) 주(도지사급)이상의 지방자치단체장
- 3)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인사

나. 정부기관은 각 기관별로 국제협력을 주관하는 과를 지정하여 초청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피초청인사와의 유대를 지속하고 피초청인사의 기록 등을 종합 관리할 것.

다. 상기 사전협의대상 외국인에 대한 초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외교경로를 통하여 전달할 것.



議案番號	第 95-2 號
議決 年 月 日	1995. 8. 29. (第 13 回)

議決事項

政府各種委員會の女性委員參與擴大方案

女性政策審議委員會

提出者	委員 金 長 淑 (政務長官 (第2))
提出年月日	1995. 8. .

〈별첨 III〉

위원회 여성참여와 관련한 유엔등의 권고내용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제90/4호, 6호)
 - 여성지위향상이 국가의 정책결정의 우선 과제이며 국가의 의사결정에 여성이 완전한 동반자가 되어야 함
 - 정부간, 비정부간 기구의 의사결정직에 있는 여성수가 증가되어야 하며 정부는 정책결정에서의 여성참여의 구조, 기타 장애에 관한 연구를 촉진해야 함
 - 정부, 정당, 노동조합들은 2000년까지 남녀평등 참여를 달성키 위해 지도적 지위에 취임하는 여성비율을 '95년까지 적어도 30%까지 늘리도록 노력해야 함
- 유엔총회 결의(제37/61호)
 - 여성이 균등하게 참여하지 않은 국가 및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직에 남성과 동일하게 여성을 지명하고 임명하는 특별한 노력을 할 것을 요청
 - 유엔사무총장, 유엔 전문기구는 유엔사무처 및 유엔기구의 의사결정직에 여성을 선출하고 임명할 노력을 증대시킬 것을 요청

○ 아시아·태평양 여성발전 행동강령

- 모든 단계의 정책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온전한 참여증진(능력과 자격을 전제로 함)을 목표로 권력 및 정책결정에 여성 참여를 지원해야 함
 - *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 주최 아·태 여성개발 각료회의에서 채택

○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행동강령(안)

- 『의사결정 및 권력배분 과정에서의 참여 불평등』을 여성발전의 주요 관심분야로 보고 권력구조 및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는 요인을 강화해야 하며 각국별로 목표 수치를 설정해야 함
 - * '95. 9월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 예정

1. 議決主文

정부내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확대를 위하여 별지
계획과 같이 추진하기로 의결한다.

2. 提案理由

가. 제5차 및 제7차 여성정책심의위원회('88.9.30, '89.7.20)
와 국무총리지시 제12호 “정부 각종위원회의 여성위
원 참여 확대지침”(‘89.8.24)에 의거, 정부 각종위원회
의 여성위원 참여율을 2000년까지 15%로 달성키 위
한 기본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음

나. 정부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율 제고는 사회전반에 걸
쳐 여성의 참여를 선도하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
하고 아직도 정부부처의 인식과 관리방식의 소극성
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여성참여 실적은 7.2%(‘94.9.30
현재)에 불과함

다. 이에따라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해야 할 필요와 유
엔의 권고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표율을 상향 조
정하고, 관리방식의 개선과 정기평가를 제도화하여
지속적으로 여성위원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3. 主要骨子

-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여성위원 참여목표율을 유엔 권고기준으로 상향조정
 - 2000년까지 15%목표율을 2005년까지 30%로 수정함
- 적극적인 여성참여 확대가 가능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를 특별관리위원회로 선정하여 이를 중점관리함
- 신설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여성위원이 30%가 되도록 하고 부처별로 여성참여확대가 조기에 가능한 위원회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관리
- 분야별 여성인적자료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각부처에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함

정부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확대방안

=====

□ 배경 및 목적

-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확대는 사회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선도하는 기능이 큼에도 불구하고 정부내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7.2%에 불과함
- 여성의 사회참여분야중 낙후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성의 요구와 역량을 통합함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을 촉진코자 함

□ 기본방향

-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목표율을 현행 15%선에서 유엔 권고기준인 30%선으로 확대하고자 함
-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여성이 균형있게 참여함과 아울러 지속적으로 참여율을 향상하고자 함
- 위원회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여성인적 자료를 발굴, 부처에 제공하고자 함

□ 여성위원 참여현황

1. '94년도 현황

○ 총 괄

'94. 9. 30 현재

구 분		전 체	여성참여	참여율 (%)	비 고
위원회수		* 330 개	100 개	30.1	* 당연직만 있는 위원회는 제외
위 원 수	계	16,612명	1,191명	7.2	
	당연직	2,292명	31명	1.4	
	위촉직	14,320명	1,160명	8.8	

○ 부처별 여성위원 참여현황 : 별첨 참고

- 참여율이 비교적 높은 부처 : 7개 부처

정무장관(제2)실(54.8%), 보건복지부(14.5%), 경찰청(14.3%),
통일원(10.9%), 교육부(10.4%), 대검찰청(9.0%), 노동부(7.9%)

- 여성참여가 전무한 부처 : 11개 부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방부, 조달청, 통계청, 관세청, 병무청,
산림청, 특허청, 해운항만청, 수산청

2. 연도별 참여율

연 도	위 원 회 수			위 원 수		
	총수	여성참여 위원회수	참여율 (%)	총수	여성위원수	참여율 (%)
'94. 9	330	100	30.1	16,612	1,191	7.2
'93. 9	383	98	25.6	17,081	1,042	6.1
'92. 9	375	80	21.3	19,492	1,067	5.5
'91. 9	370	78	21.2	15,439	890	5.8
'90. 9	355	69	19.4	11,374	1,019	9.0
'89. 9	366	64	17.5	11,327	912	8.1
'88.12	346	48	13.9	10,645	585	5.5
'84.12	364	35	9.6	7,071	156	2.2

□ 부진사유 및 문제점

- 여성위원을 단순히 여성의 몫 또는 구색으로 참여시키는 편견적인 관행이 상존하고 있고 부처 관계자의 여성에 대한 이해와 여성위원 참여확대의 의지가 부족
- 자격과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진출 분야가 극히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국가정책에 관계되는 위원회에 참여키 어려움
 - 국방, 보건, 법제, 산림, 수산등 분야에 여성위원 없음
- 여성에 대한 인적자료와 정보 부족으로 위촉기준에 합당한 여성의 경우도 배제되기 쉬움

□ 향후 추진계획

1. 여성위원 참여 목표율 확대

-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유엔권고 기준으로 목표율 상향조정

- 2000년까지 15% → 2005년까지 30%

○ 방 안

- 현행 국무총리지시 전면 개정추진

※ 국무총리지시('89.8.24) : 『정부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확대 지침』

- '88년 현재의 정부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비율 5.5%를 '91년까지 10%선으로 확대하고 2000년 까지는 15%선 내외가 되도록 노력함

2. 특별관리위원회를 선정하여 중점 관리

- 적극적인 여성참여 확대가 가능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를 특별관리위원회로 함.

- 선정기준

구 분	관 리 방 법	비 고
1. 신설위원회	· 신설시 30%를 여성위원으로 위촉	수 시
2. 위촉위원의 규모가 큰 위원회(20인 이상)	· 해당부처에서 선정 · 정기관리	별첨참고 (’95.5월기준)
3. 참여목표율을 30%로 조기 달성할 위원회	· 부처별로 대상위원회 선정 · 정기관리	
4. 여성위원 참여가 용이하나 현재 여성위원이 전무한 위원회	· 부처별로 대상위원회 선정 · 정기관리	

3. 전문분야별로 인적자료 발굴, 부처에 제공

-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하여 매년 인적자료 발굴 및 인명 자료집 정기발간
 - 위원회별 성격에 적합한 전문분야 인력 자료개발
 - 취약분야의 여성 전문인력 지속 발굴

□ 행정사항

- 현행 '89년도 국무총리 지시를 전면 개정 추진

※ 별첨자료

- I. 부처별 여성위원 참여현황('94.9.30 현재)
- II. 위촉위원의 규모가 큰 위원회현황('95.5.30 기준)
- III. 위원회 여성참여와 관련한 유엔등의 권고내용

부처별 여성위원 참여현황

=====

('94. 9. 30 현재)

부처별	위 원 회 수			위 원 수			여 성 위 원 수			여성위원 참여율(%)			
	계	여성 위원 수	(%)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계	위촉직	전 체	'93 참여율	전 년 대 비
총 계	330 (380)	(100)	30.1	2,292	14,320	16,612	31	1,160	1,191	8.8	7.2	6.1	1.1
감 사 원	1	1	100	0	18	18	0	1	1	5.6	5.6	1.6	4.0
총리행조실	3	3	100	0	54	54	0	3	3	5.6	5.6	7.0	△1.4
정무장관 (제2)실	1	1	100	13	182	31	2	15	17	83.3	54.8	64.0	△9.2
경제기획원	10	2	20	132	72	204	2	2	4	2.8	2.0	7.1	△5.1
통 일 원	3	3	100	2	82	84	0	9	9	11.0	10.9	10.0	0.9
총 무 처	11	4	36.3	74	125	199	0	6	6	4.8	3.0	2.8	0.2
과학기술처	12	1	8.3	83	109	192	0	1	1	0.9	0.5	1.0	△0.5
환 경 처	24	6	25.0	180	253	433	0	9	9	3.6	2.1	1.7	0.4
공 보 처	0	-	-	-	-	-	-	-	-	-	-	-	-
법 제 처	1	0	0	5	5	10	0	0	0	0	0	0	-
국가보훈처	4	0	0	18	31	49	0	0	0	0	0	0	-
외 무 부	3	1	33.3	11	42	53	0	2	2	4.8	3.8	3.2	0.6
내 무 부	10	3	30.0	84	124	208	1	3	4	2.4	1.9	1.0	0.9
재 무 부	16	2	12.5	107	211	318	0	2	2	0.9	0.6	0	0.6
법 무 부	15	3	20.0	32	111	143	0	4	4	3.6	2.8	1.9	0.9
국 방 부	14	0	0	103	95	198	0	0	0	0	0	0	-
교 육 부	10	5	50.0	177	1,551	1,728	11	169	180	10.9	10.4	14.4	△4.0
문화체육부	8	6	75.0	56	283	339	1	20	21	7.1	6.2	7.3	△0.9
농림수산부	23	6	26.1	182	265	447	0	1	9	3.4	2.0	0.8	1.2

부처별 여성위원 참여현황

('94. 9. 30 현재)

부처별	위 원 회 수			위 원 수			여 성 위 원 수			여성위원 참여율(%)			
	계	여성 위원 수	(%)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계	위촉직	전 체	'93 참여율	전 년 대 비
총 계	330 (380)	(100)	30.1	2,292	14,320	16,612	31	1,160	1,191	8.8	7.2	6.1	1.1
감 사 원	1	1	100	0	18	18	0	1	1	5.6	5.6	1.6	4.0
총리행조실	3	3	100	0	54	54	0	3	3	5.6	5.6	7.0	△1.4
정무장관 (제2)실	1	1	100	13	182	31	2	15	17	83.3	54.8	64.0	△9.2
경제기획원	10	2	20	132	72	204	2	2	4	2.8	2.0	7.1	△5.1
통 일 원	3	3	100	2	82	84	0	9	9	11.0	10.9	10.0	0.9
총 무 처	11	4	36.3	74	125	199	0	6	6	4.8	3.0	2.8	0.2
과학기술처	12	1	8.3	83	109	192	0	1	1	0.9	0.5	1.0	△0.5
환 경 처	24	6	25.0	180	253	433	0	9	9	3.6	2.1	1.7	0.4
공 보 처	0	-	-	-	-	-	-	-	-	-	-	-	-
법 제 처	1	0	0	5	5	10	0	0	0	0	0	0	-
국가보훈처	4	0	0	18	31	49	0	0	0	0	0	0	-
외 무 부	3	1	33.3	11	42	53	0	2	2	4.8	3.8	3.2	0.6
내 무 부	10	3	30.0	84	124	208	1	3	4	2.4	1.9	1.0	0.9
재 무 부	16	2	12.5	107	211	318	0	2	2	0.9	0.6	0	0.6
법 무 부	15	3	20.0	32	111	143	0	4	4	3.6	2.8	1.9	0.9
국 방 부	14	0	0	103	95	198	0	0	0	0	0	0	-
교 육 부	10	5	50.0	177	1,551	1,728	11	169	180	10.9	10.4	14.4	△4.0
문화체육부	8	6	75.0	56	283	339	1	20	21	7.1	6.2	7.3	△0.9
농림수산부	23	6	26.1	182	265	447	0	1	9	3.4	2.0	0.8	1.2

<별첨 II>

위촉위원의 규모가 큰 위원회(20인이상) 현황

('95.5.30 기준)

부처별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장	위 원 수			임기	차 기 위촉시기
				계	당연직	위촉직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범국민가뭇극복 대책위원회	대통령지시	국무총리	33	12	21 (2)		
재정경제원	세제발전 심의위원회	훈 령	대한상공 회의소회장	59	7	52		
통 일 원	정책자문위원회	대통령령	장 관	40	2	38 (2)	1년	'95. 7
	통일고문회의	"	민 관 식	29		29 (4)	4년	'97. 6
총 무 처	사법시험위원회	대통령령	장 관	60	2	58 (3)		
	행정절차법안 심의위원회	"	장관지명	20		20		
공 보 처	언론중재위원회	법 률	김 두 현	69	.	69 (2)	3년	'96. 3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	"		24		24	해촉시 까지	

()는 여성위원수

부처별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장	위 원 수			임 기	차 기 위촉시기
				계	당연직	위촉직		
외무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김달중	32		32 (1)	1년	'96. 3
내무부	지방세 심의위원회	법률	차관	30	3	27	2년 세제분과 과표분과 심사청구 분과	'97. 7 '95. 12 '97. 4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장관	41		41 (1)	1년	'96. 6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 심의위원회	대통령령	차관	31	1	30 (1)	2년	'96. 12
국방부	특별건설기술 심의위원회	법률	차관보	86	6	80 (2)	2년	'96. 10
교육부	중앙교육심의회	대통령령	호선	59	.	59 (2)	2년	'96. 11
	1종도서편찬위원회	대통령령	호선	1,563	42 (5)	1,521 (121)	.	.
	학술진흥위원회	대통령령	호선	35		35	2년	'95. 9
	교육개혁위원회	"	대통령위촉	25		25 (2)	2년	'96. 2

부처별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장	위 원 수			임 기	차 기 위촉시기
				계	당연직	위촉직		
문체부	국어심의위원회	법 률	이 기 문	59		59 (3)	2 년	'96. 7 ~ '97. 2
	문화재위원회	법 률	임 창 순	49		49 (1)	2 년	'97. 4
농 립 수산부	농수산기술 정책심의회	법 률	호 선	35	4	31	2 년	'96. 5
	수의사국가시험 위원회	"	차 관	22	2	20	1 년	'96. 1
	양곡유통위원회	법 률	호 선	20		20 (3)	1 년	'95. 9
통 상 산업부	대한민국산업 디자인 전람회 출품물심사위원회	대통령령	봉 상 균	50		50 (7)	1 년	'96.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심의회	법 률	국 장	21	1	20		
	중소기업계열화 촉진협의회	"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장	22	1	21	2 년	'97
	대체에너지기술 개발정책심의회	"	차 관	41	2	39 (1)	2 년	'96. 11

부처별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장	위 원 수			임 기	차 기 위촉시기
				계	당연직	위촉직		
환경부	대권역환경관리위원회	법 률	차 관	50	25	25	2년	'96. 1
	자연환경분과위원회	법 률	국 장	21	1	20	2년	'97. 1
	폐기물처리분과위원회	법 률	국 장	27	1	26	2년	'97. 1
	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	법 률	국 장	43	1	42 (2)	2년	'97. 1
	환경기술분과위원회	법 률	실 장	21	1	20 (1)	4년	'97. 1
	한강본류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	법 률	한강환경 관리청장	30	8	22 (4)	2년	'96. 5
	지방환경영향평가위원회(한강)	법 률	한강환경 관리청 국장	21		21	2년	'96. 8
	지방환경영향평가위원회(낙동강)	법 률	낙동강환 경관리청 국장	21		21 (1)	2년	'96. 9
	지방환경영향평가위원회(영산강)	법 률	영산강환 경관리청 국장	21		21	2년	'96. 6

부처별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장	위 원 수			임 기	차 기 위촉시기
				계	당연직	위촉직		
환경부	지방환경영향평가위원회(금강)	법 률	금강환경 관리청장	21		21	2년	'96. 9
	지방환경영향평가위원회(대구)	법 률	대구지방 환경관리 청과장	21		21	2년	'96. 8
	지방환경영향평가위원회(원주)	법 률	원주지방 환경관리 청장	21		21	2년	'96. 9
	고도정수처리 기술자문협의회	법 률	차 관	30	4	26	2년	'96. 5
보 건 복지부	보건교육 자문위원회	훈 령	박 형 종	36	1	35 (4)	2년	'96. 5.26
	국립암센터건립 추진자문위원회	훈 령	장 우 현	27	3	24 (2)		'95. 10
	식품위생 심의위원회	법 률	차 관	60	5	55	2년	'96. 4
	중앙약사 심의위원회	법 률	차 관	100	2	98	2년	'96.1.15

부처별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장	위 원 수			임 기	차 기 위촉시기
				계	당연직	위촉직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 률	김용소의 13	420		420 (4)	2년	'96. 7
	최저임금심의 위원회	"	조 기 준	26		26 (1)	3년	'96. 11
	고용문제 조정위원회	법 률	강기원의 5명	90		90 (52)	3년	'98
건 설 교통부	국토건설종합계획 심의회	법 률	국무총리	32	11	21 (1)	4년	'98. 6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훈 령	실 장	25		25 (2)	2년	'96. 10
	중앙건설기술심의 위원회	법 률	건설지원 실장	200	5	195	2년	'96. 1
	건축사위원회	대통령령	차 관	30	1	29	1년	'96. 5
대검찰청	선도위원협의회	지 침		5,566	10	5,556 (266)		
	의료자문협의회	규 정		873	13	862 (15)		
	범죄예방자원 봉사자협의회	규 정		1,564		1,564 (413)		

부처별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장	위 원 수			임 기	차 기 위촉시기
				계	당연직	위촉직		
통계청	통계위원회	대통령령	청 장	61	10	51 (1)	2년	'95. 6
문화재 관리국	문화재위원회	법 률	임 창 순	49		49 (1)	2년	'97
공 업 진흥청	산업표준심의 위원회	법 률	강 명 순	300	77	223 (2)	3년	'97. 4

국무총리행정조정실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

/ 전화(02)720-2015

/ 전송 737-0109

문호 국행일20201-15

시일자 '95. 1. 19.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행정조정실장	국무총리
보존	영구		
조정관	조	1.15 康	
심의관	심	일반행정심의관	
서기관	서		
기안	민지홍		협조

제목 대외관계업무처리에관한지침 개정 (국무총리지시 제 94-26 (94.10.26)호 개정)

정부의 세계화 시책에 맞추어 외국인사 초청조정제도의 개선을 위해 대외관계업무 처리에관한지침을 별첨과 같이 개정.시행코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대외관계업무처리에관한지침중 개정지침(안) 끝.

제 2 안)

국행 20201-15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대외관계업무처리에관한지침중 개정지침(국무총리지시 제 95-2호) 시달

정부의 세계화 시책에 맞추어 외국인사 초청시 국무총리의 조정제도의 폐지 등 대외관계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별첨과 같이 개정.시달하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첨부 대외관계업무처리에관한지침중 개정지침(국무총리지시 제 95-2호) 1부. 끝.



국무총리

가 02 07-17, 20-32, 40-54, 56, 57), 나(01-06, 10-18)

(제 3 안)

국행일 20201-15

수신 총무처장관

제목 관보게재 의뢰

별첨 대외관계업무처리에관한지침중 개정지침(국무총리지시 제¹⁹⁹⁵₋₂호)을 관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대외관계업무처리에관한지침중 개정지침(국무총리지시 제¹⁹⁹⁵₋₂호) 사본2부. 끝.

국 무 총 리 행 정 조 정 실 장

(제 4 안)

국행일 20201-15

수신 대통령비서실장

제목 대외관계업무처리에관한지침 개정 시달보고

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맞추어 외국인사 초청시 국무총리의 조정제도의 폐지 등 대외관계업무처리에관한지침을 별첨과 같이 개정.시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첨부 : 대외관계업무처리에관한지침중 개정지침(국무총리지시 제¹⁹⁹⁵₋₂호) 사본1부. 끝.

국 무 총 리 행 정 조 정 실 장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

/ 전화(02)720-2015

/ 전송 737-0109

문서번호 국행일20201-15

시행일자 '95.1. 19.(영구)

수신 수신처참조(국가안전기획부장)

참조

선결			지	
접	일	자	시	
	시	간	결	
수	번	호	재	
			공	
처	리	과	람	
담	당	자		

제목 대외관계업무처리에관한지침중 개정지침(국무총리지시 제1995-2호) 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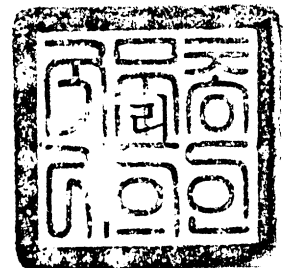
정부의 세계화 시책에 맞추어 외국인사 초청시 국무총리의 조정제도의 폐지 등 대외관계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별첨과 같이 개정.시달하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첨부 : 대외관계업무처리에관한지침중 개정지침(국무총리지시 제1995-2호) 1부. 끝.

국

무

총



가(03, 07-17, 20-32, 40-54, 56, 57), 나(01-06, 10-18)

대외관계업무처리에관한지침중 개정지침

대외관계업무처리에관한지침중 외국인사의 초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외국인사의 초청에 관한 사항

가.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업체(이하 "정부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의 고위인사를 국내에 초청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외무부 등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칠 것.

1) 외국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단, 국가원수, 국무총리, 외무부장관은 제외

2) 주(도지사급)이상의 지방자치단체장

3)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인사

나. 정부기관은 각 기관별로 국제협력을 주관하는 과를 지정하여 초청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피초청인사와의 유대를 지속하고 피초청인사의 기록 등을 종합 관리할 것.

다. 상기 사전협의대상 외국인에 대한 초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외교경로를 통하여 전달할 것.